

전략연구 2018-

# 충남 청년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김양중





# 충남 청년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0년 7.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9.8%까지 증가
- 높은 청년실업률이 장기화 된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청년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충남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 확보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청년부채의 원인과 그로인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청년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2. 청년부채 현황

- 가계부채의 기초통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이 있음
  - 그러나 18세~34세의 연령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가구주만을 대상
- 따라서 청년개인의 부채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부채범위와 추세파악이 가능
  - 2017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자산은 9,781만원, 평균부채는 2,385만원, 평균가처분소득은 2,814만원
  - 부채가구만 살펴보면 2017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자산은 13,759만원, 평균부채는 4,957만원, 평균가처분소득은 3,207만원
  - 2012년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1,283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385만원까지 급증
  -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부채가구만 살펴보면 2012년 평균부채는 2,367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957만원으로 증가

[그림 1] 30세 미만 가구주 자산 및 부채 추이



### 3. 청년부채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및 표본

- 본 설문은 18세~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이며, 청년의 범주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업자, 취업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

〈표 1〉 설문조사 대상자 구분

①	②	③	③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업자	취업자

- 설문지 표본은 지역별로 랜덤 추출된 300명이며,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신뢰도를 높임

〈표 2〉 표본 설계

모집단	충남에 거주하는 18세~34세 청년
표본크기	300명 대상
표본추출	지역별 랜덤추출 방법 활용

## 2) 설문지 주요내용

- 청년부채의 실태, 원인, 그로인한 문제점, 정책과의 미스매치, 해소방안까지 등 청년부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

〔그림 2〕 설문지 주요내용



## 4.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 삶의 질과 부채 실태

- 청년들의 현재 삶의 질은 10점 만점으로 볼 때 평균 6.5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삶의 질 평가가 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도 6.1점으로  
취업자나 사업자의 6.9점, 6.8점보다 낮게 조사 ⇨ 낮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월평균 소득은 80만원 정도로 매우 낮지만 지출은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아르바이트와 용돈이 대부분) ⇨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 문화·여가비의 지출이 높았  
지만,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학비, 교육비, 식비 등 생필품 지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해결이 필요

#### ■ 부채 원인

- 졸업 후 취직기간이 길고,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움  
⇨ 긴 취직기간은 청년부채 증가의 한 원인
-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부채는 대부분 학자금이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에 나가기전  
이미 928만원의 빚을 지고 시작  
-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기 쉬운 학자금 대출로 학자금을 충당하여 빚을 지기 쉬운 구조  
⇨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
- 청년들의 과소비와 부채 간에는 분명 개연성이 있음. 그러나 청년들의 주된 부채가 학  
자금이란 점에서 청년들의 물질주의나 과소비가 부채의 원인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음  
⇨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원인은 소비문화보다는 부족한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적은 소득,  
부족한 금융정책에 더 큰 비중이 있음

## ■ 부채로 인한 문제점

- 청년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문화·여가비로 나타남
  - ⇒ 부채감소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함(실제로 생활비대출을 받아 문화·여가비에 활용)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채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는 비중이 높음
- 사업자의 경우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이 42.4%를 높게 나타남
  - 특히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가 사업자금이고 30.3%가 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이었고 15.2%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학생 때부터 선제적인 대출 및 지출관리 습관 유도, 올바른 창업교육 등 필요
    - ⇒ 실패에 관대한 청년창업펀드 등 지원도 필요

## ■ 정책과의 미스매치

- 청년·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학자금대출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대출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 IPA 분석결과 금융지원은 지속유지 사업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는 현금지원이 중점강화사업으로 나타남
  - ⇒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격의 포괄보조사업(청년구직촉진 수당 등) 추진 필요
- 가장 효과적이 사업은 ①등록금인하, ②청년일자리 확대, ③청년수당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남
  -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청년들의 소비문화보다는 근본적인 교육비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

## 2) FGI 결과

- 청년부채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을 학자금 대출이라고 응답
  -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학기당 평균 5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 1,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것
  - 학자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같은 학생이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이자지원에서 배제되어 대학원생을 위한 이자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년 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생필품 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취방이나 기숙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생활비 대출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
  -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기초생활비와 주거비도 청년 부채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들의 소비문화에 대해서는 자기만족이며, 최소한의 품위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별히 청년들이 과소비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적
- 부채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이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없지만 학부 4년간 대출금액이 쌓이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의 부채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부담이 결혼과 자녀계획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년들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바라는 정책으로는 무조건 대학입학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개선, 군입대 사병월급 향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
  - 마이스터고 등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입대 후 받는 사병월급을 올려준다면, 상당부분 청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
  - 또한 국가의 정책이 모든 청년들을 포함하기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동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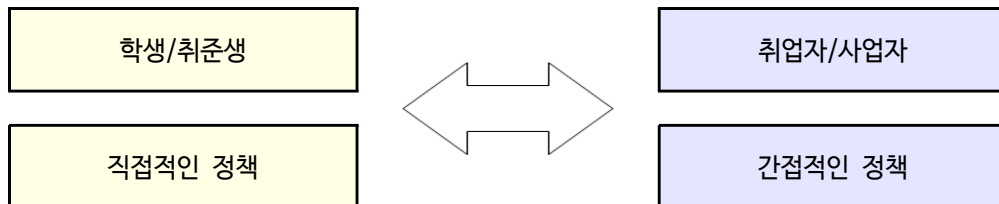


-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등록금 인하, 청년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청년 창업지원의 경우는 소수만이 혜택을 본 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시

## 5. 정책방향 및 전략

-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청년의 직업군은 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사업자 등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총합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학생·취업준비생과 취업자·사업자를 구분
  - 소득이 없는 학생·취업준비생과 소득이 있는 취업자·사업자의 부채특성은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
- 둘째 청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부채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을 구분
  -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일자리관련 정책으로 치중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채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언급
  - 그러나 이는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라기보다 간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부채에 대한 금리인하 등은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그림 3〕 청년 부채해소를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



## 1) 정책방향

〈표 3〉 3대 정책 방향

①	②	③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부채원인의 원천적 차단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 첫째, 청년들이 실수나 무지로 인한 부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의 구축
  - 올바른 사전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대출이나 올바른 지출관리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함
- 둘째는 청년들이 부채로 진입하게 되는 부채경로의 원천적인 차단
  -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첫 부채를 떠안게 됨. 따라서 긴급 생활비 지원, 장학금 확대, 포괄적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첫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채 확대를 방지
- 셋째는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취업준비생의 대출이자 면제나 완화 정책이 필요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또한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2) 추진전략

- 3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9대 전략을 제시

〈표 4〉 3대 정책방향에 따른 9대 전략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사전 경제교육을 통한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경제교육 실시</li> </ul> </li> <li>○ 전략2: 청년·서민금융 홍보를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금융, 서민금융 홍보 리플릿 제작, 설명회 개최</li> </ul> </li> <li>○ 전략3: 취·창업 교육 확대를 통해 취업 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맞춤형 취업교육, 지역 특화 창업교육 실시</li> </ul> </li> </ul>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청년 창업펀드 조성</li> </ul> </li> <li>○ 전략2: 포괄적·자율적 자금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청년수당, 청년통장 추진</li> </ul> </li> <li>○ 전략3: 청년들의 주거·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문화·여가활동 보조 및 다양한 행사 마련</li> </ul> </li> </ul>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부채자의 이자면제 및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지원 대상 확대, 사각지대 조사</li> </ul> </li> <li>○ 전략2: 청년 펀드(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희망펀드 조성</li> </ul> </li> <li>○ 전략3: 청년 신용회복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li> </ul> </li> </ul>

### 3) 연구의 한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두 가지 한계가 있음
- 첫 번째는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
  -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학자금과 청년들의 생활비, 주거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에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지역적 특성은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 안에서 예산이나 대상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
- 두 번째는 시간적·예산적 제약으로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함
  - 따라서 향후 충남도청의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전략별 사업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4. 선행연구 검토 .....	4
제2장 청년부채 현황 .....	16
1. 청년 가구주 부채현황 .....	16
2. 청년 가구주 부채추이 .....	18
제3장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	21
1. 설문지 개요 및 주요내용 .....	21
2. 설문조사 분석결과 .....	24
3. FGI 분석결과 .....	45
제4장 정책방향 및 전략 .....	63
1. 정책방향 .....	65
2. 추진전략 .....	66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69
<참고문헌> .....	7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N포세대<sup>1)</sup>, 지옥고<sup>2)</sup>, 니트족<sup>3)</sup> 등 청년관련 신조어가 생겨나고 높은 청년 실업률, 청년 부채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 1〉 청년층(15~29세) 고용동향

(단위: %,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가능인구	9,735	9,660	9,531	9,439	9,395	9,380	9,363	9,282
경제활동 인구	4,269	4,229	4,150	4,053	4,179	4,253	4,334	4,333
취업자	3,930	3,907	3,837	3,728	3,802	3,864	3,908	3,907
실업자	339	322	312	324	378	389	426	426
실업률	7.9	7.6	7.5	8.0	9.0	9.1	9.8	9.8
고용률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경제활동참가율	43.9	43.8	43.5	42.9	44.5	45.3	46.3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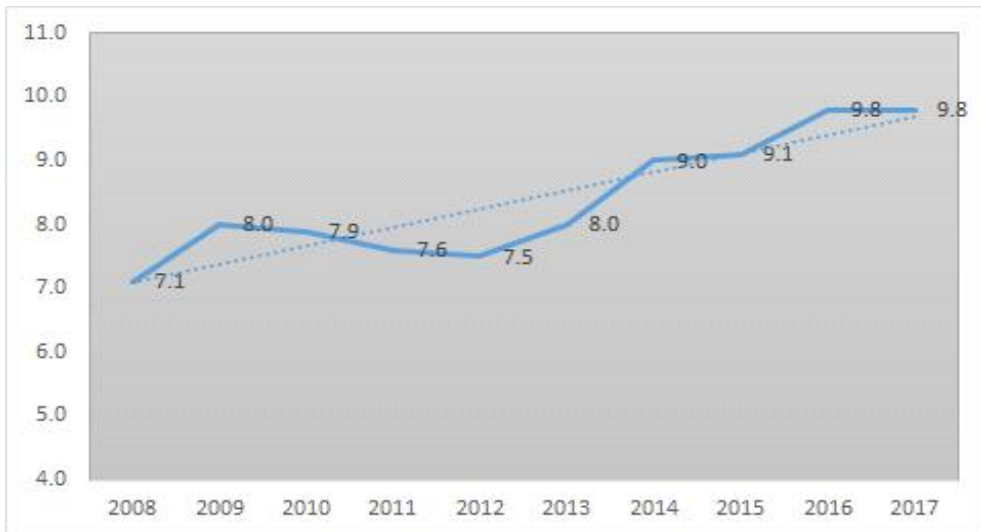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0년 7.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9.8%까지 증가하고 있다.

- 1) N포세대란 2015년 취업시장 신조어로,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로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 2) 지옥고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말로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
- 3)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함

[그림 1]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단위: %)



출처: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이 장기화 된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청년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충남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 확보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연구의 목적

청년들의 고용에서 시작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취업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여가는 물론 청년들의 정책참여까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들의 부채와 관련된 연구는 선행연구를 찾아보더라도 많지 않고, 충남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

청년 부채문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문제로 소급되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학자금대출로归结되는 측면이 있다.

청년 부채문제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상당히 좁은 시야로 문제를 진다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 없다 보니 더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한영섭 외)

따라서 청년부채의 원인과 그로인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청년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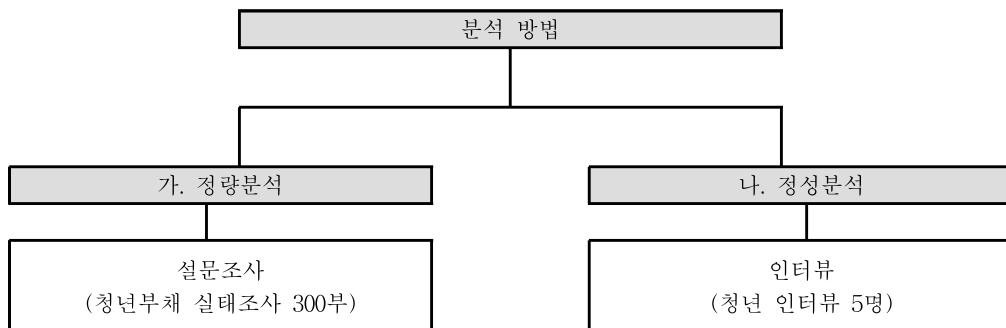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8~34세의 청년들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8년도 기준이다. 내용적 범위로는 먼저 국가의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청년부채의 기초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충남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청년부채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충남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①	②	③	④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	충남 청년부채 기초통계 파악	충남 청년부채 실태조사	충남의 정책방향 및 전략 수립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분석과 청년 인터뷰를 통한 정성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뷰는 취업준비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 연구의 방법





## 4. 선행연구 검토

### 1) 청년층 부채악성화 경로추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2015), 서울시 청년허브

#### 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한계와 보완

등록금 경감 : 학자금을 대출의 제도적 보완을 논하기 전 우리는 과도한 등록금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폐지 : 학자금대출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이자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 ② 청년층 단계별 금융공급정책

대학생·청년 햇살론 연령 상향 조정 필요 : 장기간 구직기간이 늘어나 신규 금융공급이 필요한 계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옮겨 가고 있는 현실에서 35세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과잉대출에서 적정대출로 : 가계생활 사전 상담을 통해 적정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 현실을 감안하여보다 유연한 연체관리가 필요하다.

성실상환자 단계별 부담경감 : 이미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고금리 - 중금리 - 저금리 - 일부 탕감 으로 단계별 금리차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첫 신용등급 상향 조정 :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첫 시작 신용등급이 보통 5~6 등급부터 이다. 이는 첫 시작부터 불공정한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저신용 상태의 청년들이 겪는 부당함을 없앨 수 있다.

#### ③ 청년층 신용회복과 부채경감 대책

청년신용회복기금조성 (청년경제활력기금) : 부채반복과 악성화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3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50% 이상 채무조정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청년층 단기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최대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고 빠르게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회생처럼 정해진 기간(통상 5년)동안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처럼,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8년 장기 상환이 아니라 3년 5년 성실히 상환을 하게 해주면 잔존채무에 대해 채무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 필요하다면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청년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앞서 이야기한 자금조성과 채무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

#### ④ 튼튼한 사회안전망 : 다양한 청년 사회정책

청년구직수당, 청년배당 등의 도입 :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구직수당, 서울시 활동수당 등이 도입되면 청년부채 문제는 점진적으로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강화 :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중요한 과제 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의 공정한 분배체계를 잘 만들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강화 : 고용보험의 가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부조를 문턱을 낮추고 1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노동유연화에 대처해야 한다. 고용보험 강화로 노동유연화에 대처하고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

## 2) 빚쟁이 청년들: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2014) , 최계연, 월간복지동향

### ① 부채 악성화 사전 차단을 위해 금융복지 상담 필요

금융복지 상담 제공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상환 계획 수립과, 생애전반에 걸친 재무관리 방향과 목표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연체로 인한 채무 독촉의 경험에서 위축된 심리적 치유를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며,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채무 조정 상담이 필요하다.

## ② 빚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신용 교육을 강화해 사회 첫 시작부터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 마케팅이 상환 능력 이상의 소비자에게 신용을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안게 될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 비정규직 노동 단체, 청년 유니온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신용회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청년 세대 소득 수준에 맞는 원리금 면책 및 6개월 완료 워크아웃 프로그램 필요

기존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최장 10년간 빚을 갚으며 채무 노예화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년 세대에게 장기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노동 의욕 저하, 미래 설계 동기 상실로 이어질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기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소득수준에 맞춰 채무 변제 완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세대 맞춤형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제안이 필요하다.

## ④ 기타 방안

등록금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로금리를 적용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 3)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2017), 금융위원회

### ■ 설문조사 결과

#### ○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청년의 경우 평균 흑자(월 68.3만원)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나,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대학생은 지출(등록금 포함)이 수입을 초과(월평균 52.1만원)하나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상당 준비기간이 소요

청년 5명 중 1명(19.7%)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실업률(9.2%)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4명 중 1명(26.6%)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근로자의 95.1%) 임시·일용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형태로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대부분 월세를 이용

약 4명 중 1명(22.9%)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며, 대부분 월세를 이용하였다.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하여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이 대학생에 비해 대출경험(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경험 포함)·대출잔액이 많음

청년 약 5명 중 1명이 대출을 경험(20.1%, 現 이용자는 14.2%)하였으며 학자금 이외에도 생활비,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대학생도 10% 이상이 대출을 경험(12.5%, 現 이용자는 12.0%)하였으며 주로 학자금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 채무조정 활용도가 낮음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이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15.2%)이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높은 것(대출경험자의 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경험자 중 상당수(32.3%)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을 경험하였다.

○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전반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

국가장학금, 등록금대출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나, 생활비대출 제도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햇살론, 미소금융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 ■ 정책방향

### ① 종합적인 청년·대학생 지원책 필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 중심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사업으로는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개선·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며, 취업준비생 지원 강화 및 지속적인 생활비대출, 임대주택·기숙사 등 확대, 주거비 지원도 필요하다.

### ② 신용정보 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

신용정보 관리 개선,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안내를 통해 재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 ③ 청년·대학생 대출 감독 강화

청년·대학생 대출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 ④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정책서민금융이 필요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4)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2016), 백종호, 주간 하나금융포커스, 제6권 43호

학자금, 생활비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는 취업난 등으로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은행은 실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재산형성이 어려워지는 등 청년층 금융시장의 발전이 지연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예·적금 위주의 상품 제공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 수익에 직접 연계되는 대출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청년대상 금융상품이 상위 단계로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층 금융은 비은행권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청년층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이 급증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 정책방향

### ① 정부는 청년층 자금수요를 고려, 금융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재설정 필요

정부의 청년층 공적지원 제도는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저리 조건' 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층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또한, 기존의 연령대별 분류 외에 청년층 부채 악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규모, 신용도별 통합적인 수치 집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산, 부채, 신용상태별로 청년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금융자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② 금융권은 업권별 강점을 살린 세분화된 청년층 금융상품 개발로 관련 시장 확대 필요

청년층 금융지원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정 영역에 강점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은행은 기존의 청년 전용 예·적금계좌, 체크카드 등 단순 상품 위주에서 학자금대출, 청년 창업대출 등 상위단계로 이전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제2, 3금융권은 기존의 고금리 위주 대출상품 대신에 청년층 소액대출을 기반으로하여 예·적금, 카드 등 타상품 교차판매를 위한 상품군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은행, 핀테크회사 등은 수수료, 편의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개척, 청년층 금융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2017), 관계기관 합동

국가장학금 도입('12년) 등으로 인해 학자금 부담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등 생계자금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자금 지원한도가 생활비 실제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여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저렴한 주택 부족 등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장기 자산축적도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구직기간 장기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증가('15년 0.9만 → '16년 1.1만건)하는 등 채무부담 심화되고 있다.

## ■ 정책방향

### ①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확대

부족한 생계자금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및 대환자금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

### ②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신설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제2금융권의 저리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신설하여,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한다.

### ③ 저소득 청년·대학생 취업지원 강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

### ④ 청년·대학생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금융 이용 경험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한 청년·대학생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해야 한다.

## 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이태형, 월간복지동향

### ①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대학생들이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을 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아르바이트 소득은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 ②과도한 교육비 부담

대학 등록금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취업준비비용 또한 다양해지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 ③ 청년 생활불안과 부채문제

전체 대학생 4명 중 1명이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부채규모는 1,0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비경제인구인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빚쟁이다 되고 있다.

## ④ 사회전반의 문제로 이어지는 청년문제

청년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년세대의 사회불안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의 저복지 문제에서 대응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청년의 불안한 삶이 저출산과 고령화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⑥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법적 근거의 미비

청년정책이 어느 대상을 위한 정책인지 애매한 상황이다.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청년을 사회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법적으로 그 정의와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⑦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는 일자리정책으로 단순화 되어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의 문제이다. 현재는 정책의 수혜자가 적고 실제 효과도 미비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은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 ■ 해결 방향 및 정책제안

①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청년의 생활불안을 해결하는 정책 마련 이전에 사회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③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정책을 생활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청년생활안전법 제정).

## 6)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초년생의 신용·부채관리역량, 이희숙·곽민주, 소비자문제연구

## ■ 연구결과

①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신용·부채관리태도 수준이 높았다. 학자금대출 경험자를 대상으로한 신용·부채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초년생의 신용·부채관리지식을 측정한 결과 학자금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높아 학자금대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부채관리와 관련된 지식 혹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③ 모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신용·부채관리기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④ 신용·부채관리지식은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태도점수가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사회초년생은 알고있는 것에 비해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⑤ 학자금대출 경험유무는 사회초년생의 신용·부채관리 지식과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교육정책 제언

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신용·부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여부 요소를 기업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② 대학에서 교양교육 차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사회교육 차원에서 TV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 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다.

## 7) 청년이라는 난민 - 국민도 시민도 아닌 난민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 김상민, 문화과학

### ① 청년은 어떻게 난민이 되는가

사회는 청년에 대한 염려를 아끼지 않는 듯이 보인다. 신문 기사는 청년 실업과 그들의 생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정부 정책 또한 청년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책들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펀드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② 헬조선을 떠나고 싶은 빈곤한 청년들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 체제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한다면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는 셈이다. 청년들을 내버려 두거나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조차 배신하는 이 나라에 고립되어 청년들은 이미 난민의 처지가 되어버렸다.

## ③ 청년 거주 공간의 박탈

월세 난민, 전세 난민으로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하는 청년 난민의 삶에서 지속적인 개인 공간의 유지는 보장되지 못한다. 삶의 공간의 불안정은 삶의 불안정의 문제와 직결된다.

## ④ 부재하는 희망을 찾아나서는 불안한 내면의 정치

청년들의 경제적인 궁핍함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안정은 청년들의 거주 공간의 불안정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전반의 불안정을 낳는다. 희망 난민들은 더 이상 희망(혹은 욕망)과 같은 자기 착취를 통해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불안함과 불행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점점 작은 공동체, 작은 이야기, 작은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 ⑤ 안도 바깥도 아닌 가장자리에서의 생존

체제가 청년들을 계속 희망하고 꿈꾸게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희망으로 고문당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경쟁에서의 생존한다고 해서 곧장 체제 내로의 포섭이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생존이란 의미는 단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의미일 뿐일 수 있다.

## 8)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김문길·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청년 실업, 고용, 니트(NEET)

#### ① 청년 실업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성인 실업률에 비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그룹에 속한다.

## ② 청년 고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낮은 편이지만 청년 고용률도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42.7%에서 2013년 39.7%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41.5%로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청년 니트(NEET)

우리나라 니트의 특징으로, 학력 수준별 니트 비중에 차이가 거의 없고,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 현상에 따라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높은 1차 부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비공식적 교육 시스템(공시학원 등)에 오래 머무르는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지목하고 있다.

# ■ 청년 소득, 빈곤

## ① 청년 소득

경상소득 증가율은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다. 자산 또한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부채는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

## ② 청년 빈곤

2014년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은 9.0%로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7.1%)보다는 조금 높지만 26~65세 성인 빈곤율(9.3%), 전체 빈곤율(14.4%),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8.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제2장 청년부채 현황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기초통계를 살펴 볼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서는 18세~34세의 연령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개인의 부채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부채범위와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 1. 청년 가구주 부채현황

〈표 3〉 2017년 가구주 부채현황

(단위: 만원, %)

	자산 (만원)	부채 (만원)	가처분소득 (만원)	부채/자산 (%)	부채/가처분 소득 (%)
전체	38,164	7,022	4,118	18.4	170.5
30세 미만	9,781	2,385	2,814	24.4	84.7
30~40세 미만	28,641	6,872	4,402	24.0	156.1
40~50세 미만	39,202	8,533	4,947	21.8	172.5
50~60세 미만	44,981	8,524	5,206	19.0	163.7
60세 이상	38,569	5,175	2,645	13.4	195.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그림 3] 30세 미만 가구주 자산 및 부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2017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자산은 9,781만원, 평균부채는 2,385만원, 평균가처분소득은 2,81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4.4%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84.7%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주택구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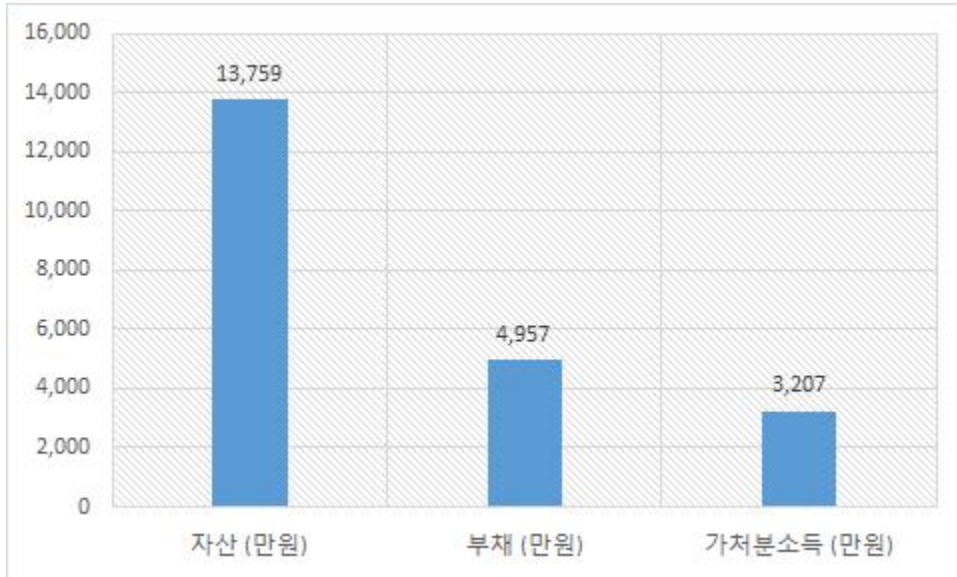
〈표 4〉 2017년 가구주 부채현황(부채가구만)

(단위: 만원, %)

	자산 (만원)	부채 (만원)	가처분소득 (만원)	부채/자산 (%)	부채/가처분소득 (%)
전체	46,814	11,117	4,742	23.7	234.4
30세 미만	13,759	4,957	3,207	36.0	154.6
30~40세 미만	31,970	9,576	4,593	30.0	208.5
40~50세 미만	43,267	11,492	5,152	26.6	223.0
50~60세 미만	51,431	12,022	5,571	23.4	215.8
60세 이상	58,437	11,161	3,510	19.1	318.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그림 4] 30세 미만 가구주 자산 및 부채(부채가구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부채가구만 살펴보면 2017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자산은 13,759만원, 평균부채는 4,957만원, 평균가처분소득은 3,207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6.0%로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 청년 가구주 부채추이

2012년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1,283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385만원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구만 살펴보면 2012년 평균부채는 2,367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95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청년부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30세 미만 가구주 자산 및 부채 추이



〈표 5〉 국가장학금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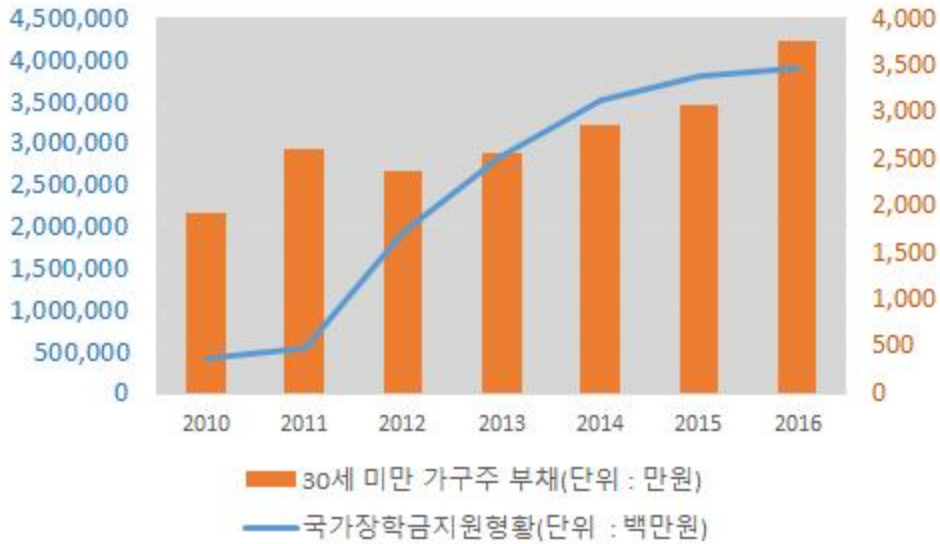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금액	89,571	161,158	382,046	411,515	551,535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금액	1,933,239	2,841,202	3,525,598	3,806,330	3,913,082

자료: 한국장학재단



〔그림 6〕 국가장학금지원금과 30세 미만 가구주 부채 추이



국가장학금의 점진적인 증액 후에도 20대 청년층의 부채는 줄어들기보다 점점 늘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0세미만 가구주 부채평균은 2010년 1,924만원에서 2017년 4,957만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 895억에서 2016년 3조9천억원으로 10년새에 44배로 증가되었다.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켰지만 청년부채 관점에서선 나아지는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 6〉 대학생 생활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출금액	122,267	174,380	314,189	526,099	564,739	531,855	504,317

자료: 한국장학재단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빚을 지게 되며 빚을 내기 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신용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이 대출을 받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부모의 부채문제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비 대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제3장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 1. 설문 의 개요 및 주요내용

#### 1) 설문 의 목적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도 및 시군단위에서 청년 부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다. 따라서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부채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충남 청년부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표본

본 설문의 조사대상은 18세~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들이다. 특히 본 설문에서는 청년의 범주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업자, 취업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7〉 설문조사 대상자 구분

①	②	③	④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업자	취업자

설문의 표본은 지역별로 랜덤 추출된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층화추출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지역별 배분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의 신뢰도를 높였다.

〈표 8〉 표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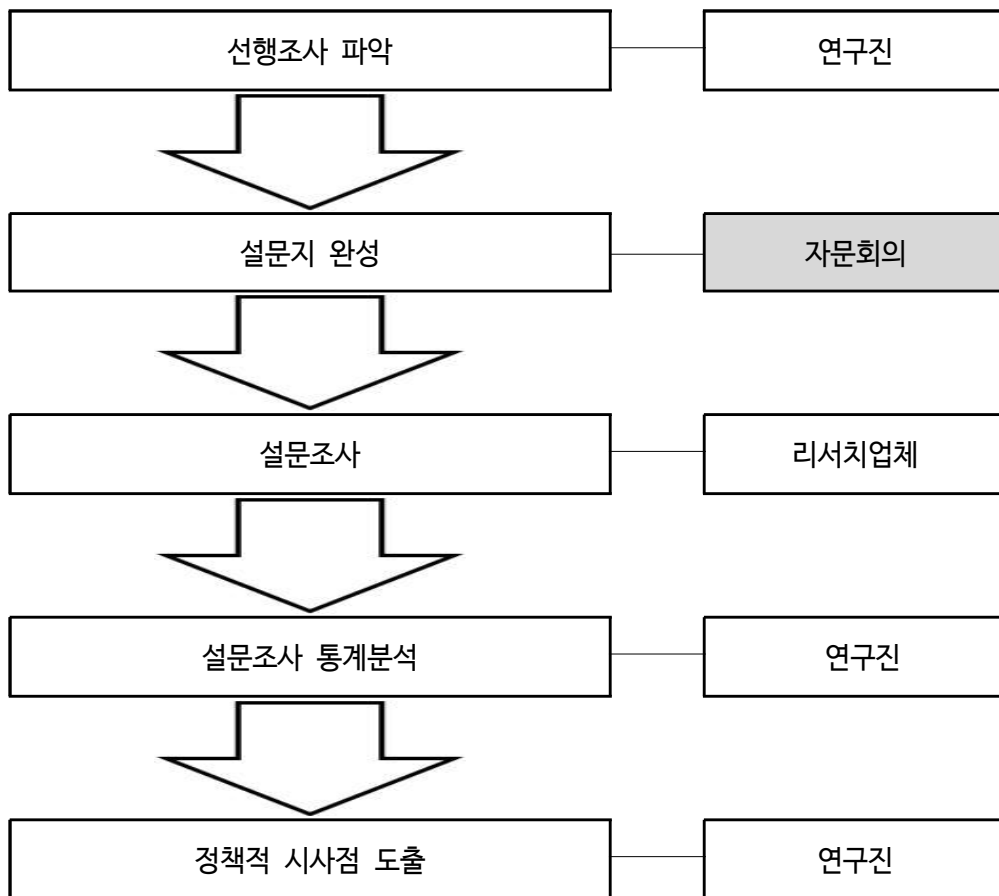
모집단	충남에 거주하는 18세~34세 청년
표본크기	300명 대상
표본추출	지역별 랜덤추출 방법 활용

〈표 9〉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 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전문가와 충청남도 담당과의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림 7〕 설문의 진행순서



### 3) 설문지 주요내용

청년부채의 실태, 원인, 그로인한 문제점, 정책과의 미스매치, 해소방안까지 청년부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8〕 설문지 주요내용



또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를 병행하여, 전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FGI는 도내 청년 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5명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진행되었다.

## 2. 설문조사 분석결과

### 1) 설문자 기초통계

〈표 10〉 남녀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남	171	51.8
여	159	48.2

〈표 11〉 거주 지역

구분	빈도	비율
도시지역	241	73.0
농·어촌 지역	89	27.0

설문조사는 남자 171명, 여자 159명이 응답하였고, 도시지역 거주자는 73.0%,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27.0%로 나타났다.

〈표 12〉 직업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학생	80	24.2
취업자(회사원 등)	167	50.6
사업자	33	10.0
무직(취준생등)	50	15.2

회사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비율이 24.2%, 취업준비생 등 무직<sup>4)</sup>의 비율이 15.2%로 나타났다.

4) 설문에서는 무직(취준생 등)으로 조사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에는 취준생으로 표시

〈표 13〉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소득	지출
학생	80	87
취업자	209	181
사업자	253	231
취준생	88	95
계	164	150

18세~34세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25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는 209만원이었다. 학생과 무직(취준생 등)의 경우는 각각 80만원, 88만원으로 조사되어 취업자, 사업자와 비교하여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평균 지출은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월평균 지출이 2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자는 181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무직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로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단순히 대출의 문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유형별 소득

구분	관측값 수	변수	비율
학생	80	근로소득	0.0
		사업소득	0.0
		용돈	43.2
		아르바이트	56.3
		기타	0.5
취업자	167	근로소득	99.5
		사업소득	0.0
		용돈	0.1
		아르바이트	0.4
		기타	0.0
사업자	33	근로소득	0.0
		사업소득	98.5
		용돈	0.0
		아르바이트	0.6
		기타	0.9
취준생	50	근로소득	0.0
		사업소득	0.0
		용돈	37.1
		아르바이트	62.2
		기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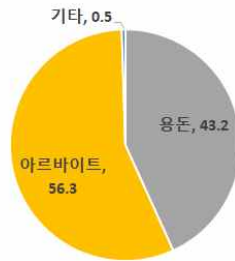
학생과 무직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은 아르바이트와 용돈이었고, 취업자는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의 경우 학생보다 아르바이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5〉 유형별 지출

구분	관측값 수	변수	비율
학생	80	식비	19.8
		주거비	4.7
		의료비	1.6
		교통/통신비	13.8
		의류/신발/오락/문화비	18.7
		학비/교육비	40.4
		기타	1.0
취업자	167	식비	21.5
		주거비	12.5
		의료비	3.8
		교통/통신비	16.7
		의류/신발/오락/문화비	22.0
		학비/교육비	4.2
		기타	19.4
사업자	33	식비	19.2
		주거비	18.3
		의료비	3.3
		교통/통신비	16.3
		의류/신발/오락/문화비	20.5
		학비/교육비	3.5
		기타	18.9
취준생	50	식비	23.8
		주거비	6.6
		의료비	2.8
		교통/통신비	17.5
		의류/신발/오락/문화비	20.4
		학비/교육비	22.9
		기타	6.1
계	330	식비	21.2
		주거비	10.3
		의료비	3.0
		교통/통신비	16.1
		의류/신발/오락/문화비	20.8
		학비/교육비	15.7
		기타	12.9

[그림 9] 유형별 소득과 지출

< 학생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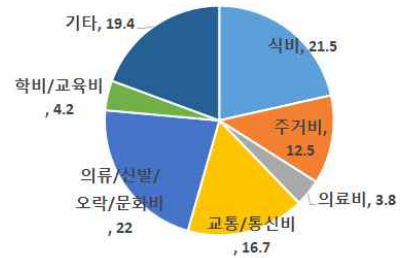
< 학생 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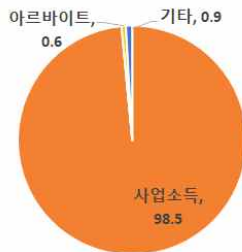
< 취업자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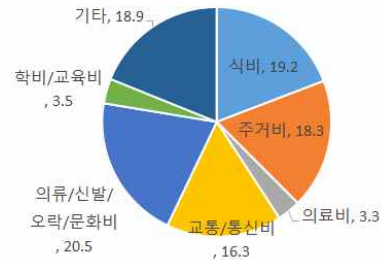
< 취업자 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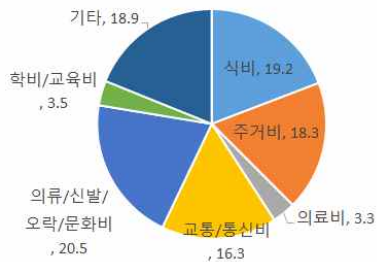
< 사업자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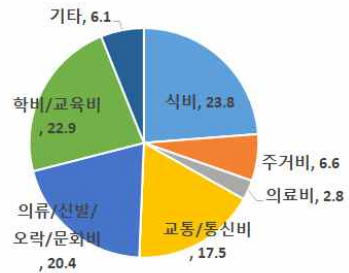
< 사업자 지출 >



< 취준생 소득 >



< 취준생 지출 >





유형별 지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식비의 비율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류/신발/오락/문화비(20.8%), 교통/통신비(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학비/교육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는 의류/신발/오락/문화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준생 등 무직의 경우는 식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비/교육비의 지출비율이 40%를 상회하여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6〉 취업자, 사업자 직종

구분	빈도	비율
제조업	68	34.0
서비스업	87	43.5
판매업	42	21.0
기타	3	1.5

〈표 17〉 취업자 근로형태

구분	빈도	비율
상용근로자	137	82.0
임시근로자	26	15.6
일용근로자	4	2.4

취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업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34.0%), 판매업(21.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근로형태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약기간이 1개월~1년인 임시근로자는 15.6%로 나타났다. 비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상용직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용직 모두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

〈표 18〉 졸업 후 취직이나 사업시작 기간

구분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12	6.0
6개월~1년 미만	59	29.5
1년~2년 미만	76	38.0
2년 이상	53	26.5

졸업 후 취직이나 사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2년 미만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1년 미만이 29.5%로 다음 순이었다. 2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도 26.5%로 나타나 졸업 후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년부채 실태

〈표 19〉 청년 부채금액

구분	변수	평균
학생	카드빚	5
	일반 대출금	1
	학자금 대출금	740
	기타	2
	계	749
취업자	카드빚	111
	일반 대출금	379
	학자금 대출금	645
	기타	41
	계	1,176
사업자	카드빚	210
	일반 대출금	2,121
	학자금 대출금	88
	기타	461
	계	2,879
취준생	카드빚	10
	일반 대출금	0
	학자금 대출금	914
	기타	4
	계	928

학생들의 평균 부채는 7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1,176만원이었다. 사업자의 경우는 2,879만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준비생은 928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에 나가기 전 이미 928만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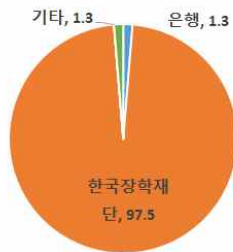
학생의 경우 역시 학자금 대출금이 가장 많았고, 청년 취업자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금과, 일반 대출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 대출금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로 여겨진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역시 학자금 대출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주요 대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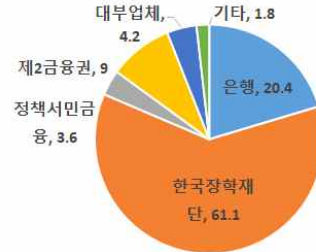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은행	1.3	20.4	30.3	2.0	13.9
한국장학재단	97.5	61.1	6.1	94.0	69.4
정책서민금융	0.0	3.6	24.2	2.0	4.6
제2금융권	0.0	9.0	21.2	0.0	6.7
대부업체	0.0	4.2	3.0	0.0	2.4
기타	1.3	1.8	15.2	2.0	3.0

〔그림 10〕 주요 대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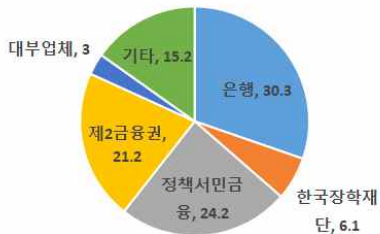
< 학생 주요 대출기관 >



< 취업자 주요 대출기관 >



< 사업자 주요 대출기관 >



< 취업준생 주요 대출기관 >



학자금대출이 많은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고, 취업자 또한 아직까지 학자금대출을 갚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대출로 인해 은행, 정책서민금융,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의 주요 대출고객은 사업자로 나타나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1〉 평균 학자금 지출 및 충당방법

구분	비율	평균 학자금 지출
부모님 및 친인척에게 의존	61.3	745만원
장학금으로 충당	50.0	
아르바이트를 해서	65.0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98.8	

주: 복수응답 기준

학생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745만원이었다. 학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생의 98.8%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65%는 아르바이트도 하여 학자금 부족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님 및 친인척에게 의존도 하고 장학금으로 충당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2〉 학자금 대출 시 애로사항

구분	백분율
대출이자가 비싸다	53.8
신청서류 작성 등 절차가 까다롭다	41.3
홍보부족 등 정보가 부족하다	5.0

학자금 대출시 애로사항으로는 대출이자가 비싸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청서류 작성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41.3%로 다음 순 이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5.0%로 낮아, 학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대출이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3) 청년부채의 원인

〈표 23〉 부채의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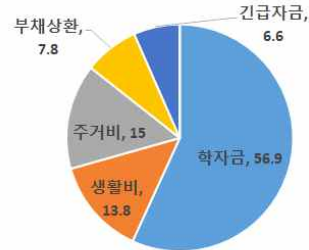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학자금	100.0	56.9	3.0	98.0	68.2
생활비	0.0	13.8	3.0	2.0	7.6
주거비	0.0	15.0	9.1	0.0	8.5
부채상환	0.0	7.8	3.0	0.0	4.2
긴급자금	0.0	6.6	0.0	0.0	3.3
사업비	0.0	0.0	81.8	0.0	8.2

〔그림 11〕 부채의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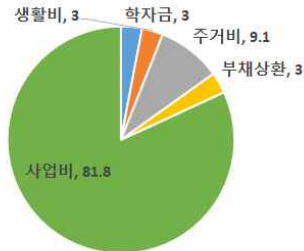
< 학생 부채의 주요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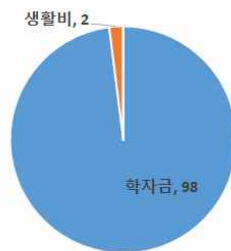
< 취업자 부채의 주요원인 >



< 사업자 부채의 주요원인 >



< 취준생 부채의 주요원인 >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은 학자금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주된 부채는 전부 학자금으로 나타났고, 취준생은 학자금이 98.0%, 생활비가 2.0%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학자금, 주거비, 생활비 순으로 나타났고,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가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이 청년부채 정책을 추진할 때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취업할 때 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4〉 청년부채 증가와 소비문화와의 상관관계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전혀 그렇지 않다	1.3	1.2	0.0	0.0	0.9
그렇지 않다	20.0	6.6	21.2	10.0	11.8
보통	17.5	23.4	12.1	22.0	20.6
그렇다	45.0	57.5	48.5	58.0	53.6
매우 그렇다	16.3	11.4	18.2	10.0	13.0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진하는 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53.6%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청년들의 과소비와 부채 간에는 분명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된 부채가 학자금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부채가 청년들의 물질주의나 과소비에 의해 늘어난다고 특정 지을 수 없다. 이는 다음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25〉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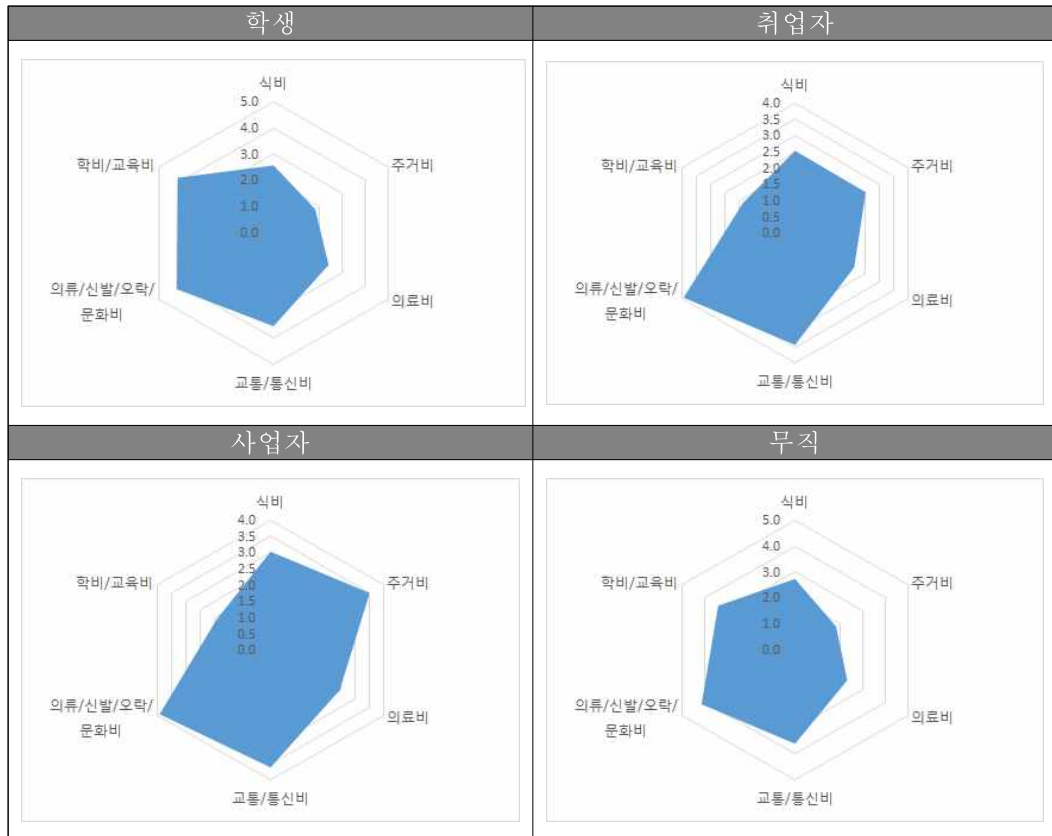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청년들의 소비가 많다	16.3	12.6	0.0	8.0	11.5
청년의 소득자체가 적다	15.0	34.1	21.2	36.0	28.5
청년 복지정책이 부족하다	48.8	19.8	33.3	34.0	30.3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이 부족하다	16.3	24.6	36.4	14.0	22.1
대부업 광고 등 청년의 대출을 부추긴다	3.8	9.0	6.1	8.0	7.3
기타	0.0	0.0	3.0	0.0	0.3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청년 복지정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청년 복지정책이 부족하다는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청년의 소득자체가 적다가 36.0%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의 경우도 청년의 소득자체가 적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경우는 금융정책의 부족을 그 이유로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청년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것과 청년들의 과소비하고는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청년부채의 증가에는 청년들의 소비문화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를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소비를 줄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원인은 소비문화보다는 부족한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적은 소득, 부족한 금융정책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의류/신발/오락/문화비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는 학비/교육비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 사업자,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교통/통신비가 다음 순 이었다. 청년부채로 인해 청년들은 식비, 주거비 등 필수 항목보다는 의류/신발/오락/문화비에 자금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부채 문제를 접근할 때 부채감소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가·문화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자금 부족 항목



〈표 26〉 자금 부족 항목

구분	변수	N	평균
학생	식비	80	2.6
	주거비	80	1.8
	의료비	80	2.4
	교통/통신비	80	3.5
	의류/신발/오락/문화비	80	4.3
	학비/교육비	80	4.2
취업자	식비	167	2.5
	주거비	167	2.5
	의료비	167	2.1
	교통/통신비	167	3.4
	의류/신발/오락/문화비	167	4.0
	학비/교육비	167	1.9
사업자	식비	33	3.0
	주거비	33	3.5
	의료비	33	2.5
	교통/통신비	33	3.6
	의류/신발/오락/문화비	33	3.9
	학비/교육비	33	1.9
취준생	식비	50	2.7
	주거비	50	1.8
	의료비	50	2.3
	교통/통신비	50	3.6
	의류/신발/오락/문화비	50	4.2
	학비/교육비	50	3.4
계	식비	330	2.6
	주거비	330	2.3
	의료비	330	2.2
	교통/통신비	330	3.5
	의류/신발/오락/문화비	330	4.1
	학비/교육비	330	2.7



〈표 27〉 부채수준 위험여부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그렇지 않다	10.0	19.2	9.1	4.0	13.6
보통	36.3	50.9	48.5	40.0	45.5
그렇다	50.0	29.9	42.4	52.0	39.4
매우 그렇다	3.8	0.0	0.0	4.0	1.5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45.5%가 ‘보통’, 3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채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차이점도 살펴보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충남이 청년부채정책을 추진할 때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취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표 28〉 학업이나 일에 대한 지장여부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그렇지 않다	8.8	20.4	9.1	4.0	13.9
보통	41.3	49.7	39.4	42.0	45.5
그렇다	48.8	25.2	51.5	44.0	36.4
매우 그렇다	1.3	4.8	0.0	10.0	4.2

부채상황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36.4%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도 4.2%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일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었으며, 학생, 취업준비생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학업이나 일에 지장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충남이 청년창업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창업이나 사업대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부채상황으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자면제나 완화정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폭넓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표 29〉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예	5.0	25.2	42.4	4.0	13.9
아니오	95.0	74.9	57.6	96.0	45.5

전체 청년들의 45.5%가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발급에 제한이 있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경우는 각각 5%, 4%만이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자의 경우 42.4%, 취업자의 경우 25.2%가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때부터 올바른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대출 및 지출관리 습관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표 30〉 최대 연체기간

구분	연체기간(개월)
학생	2.0
취업자	2.4
사업자	4.4
취준생	1.5

최대 연체기간은 사업자가 4.4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는 2.4개월, 학생은 2.0개월, 취업준비생은 1.5개월 이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보다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연체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사업자 등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부채관리가 필요한데, 학생시절부터 올바른 부채관리교육이 필요하다.**

〈표 31〉 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여부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예	0.0	6.0	30.3	0.0	6.1
아니오	100.0	94.0	69.7	100.0	93.9

사업자의 30.3%, 취업자의 6.0%가 채무불이행<sup>5)</sup> 등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연체로 여겨진다.

〈표 32〉 채무조정 경험 여부

구분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준생	계
예	0	1.2	15.2	0	2.12
아니오	100	98.8	84.9	100	97.88

특히 사업자의 15.2%는 채무조정<sup>6)</sup>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워크아웃이 40.0%, 개인 회생이 60.0%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채무조정 경험은 100% 개인워크아웃이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창업교육과 사업가 정신함양 등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실패에 어느 정도 관대한 청년창업펀드조성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 이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3가지가 있으며,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 6) 연체가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금융 회사도 연체된 빚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회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든 후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중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금융 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만든 민간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연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입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채무액이 크고, 사채를 사용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거주 지역의 해당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처한 경우, 그의 장래 수익성을 법원이 판단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원금을 포함해 모두 면책받는 제도이다. 개인 파산은 더 이상 소득이 없거나 채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개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그 개인은 곧바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빚에서 벗어나는 제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 5) 정책과의 미스매치

〈표 33〉 청년 서민금융상품 인지도

구분	취급처	인지도
대학생·청년 햇살론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58.5
취업성공대출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52.1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16.7
바뀌드림론	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15개 은행	9.4
새희망홀씨	15개 은행	12.4
정검다리론	15개 은행	23.6
든든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96.1
일반상환학자금	한국장학재단	91.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한국장학재단	60.6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통합지원센터	0.0

청년 서민금융상품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은 인지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60.6% 수준이었으며, 대학생·청년 햇살론, 취업성공대출도 각각 58.5%, 52.1% 수준이었다.

이외 금융상품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아직까지 청년들의 서민금융상품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의 인지도는 0.0%로 나타났다.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서민금융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제시된 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청년부채관련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을 사업의 성격상 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으로 구분하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금융지원은 대출금리 지원을 포함하여,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확대, 청년 사회적 금융 육성 등이며, 교육지원은 금융 상담, 신용회복 교육 강화 등이다. 또한 현금지원은 청년수당, 청년통장처럼 청년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사업이다.

〈표 34〉 청년부채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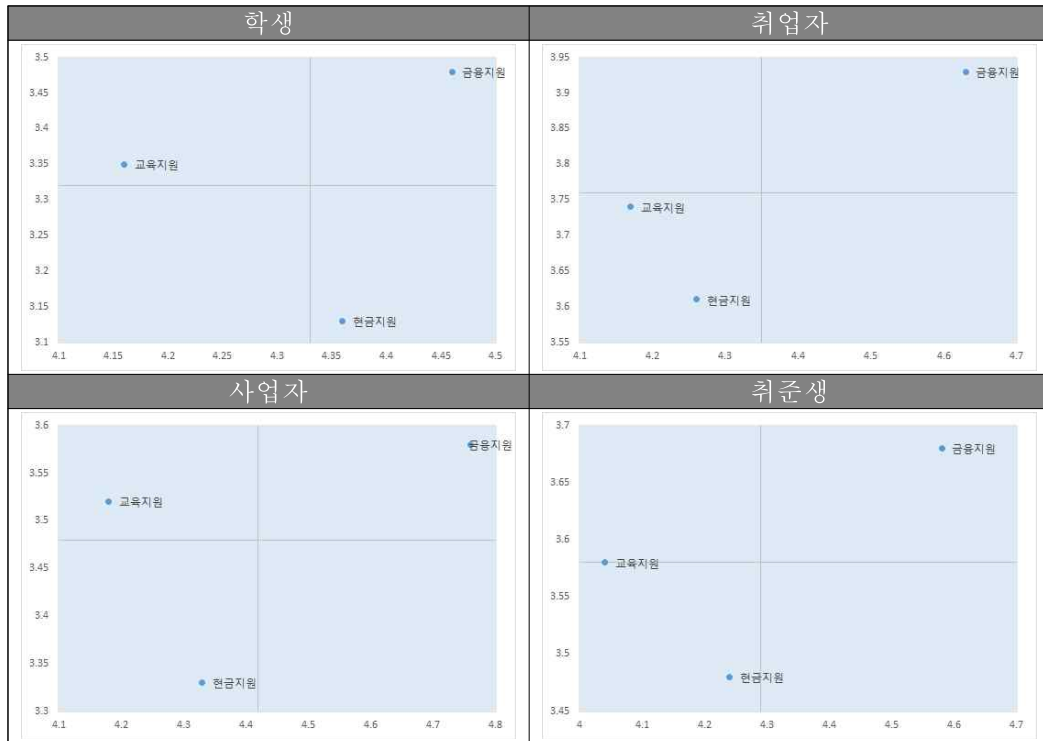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금융지원	대출금리 지원	대출금리 인하,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용회복 기금조성	기금을 통해 부채반복과 악성화 방지
	단기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발	최대 5년간 상환, 이후 잔존채무 상환면제
	학자금 지원	장학금 확대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햇살론 등 정책 홍보
교육지원	청년 사회적금융 육성	협동금융, 청년 마이크로크레딧 등
	가계생활, 금융 상담	적정대출 유도, 올바른 재무관리
	신용회복 교육 강화	상환불능 시 불이익, 신용회복 교육 등
현금지원	심리치료	채무독촉 심리 치료, 채무조정 상담 등
	청년수당	구직활동 지원금 등
	청년통장	저축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

〈표 35〉 청년부채 지원사업의 중요도 및 만족도

구분	변수	중요도	만족도
학생	금융지원	4.46	3.48
	교육지원	4.16	3.35
	현금지원	4.36	3.13
취업자	금융지원	4.63	3.93
	교육지원	4.17	3.74
	현금지원	4.26	3.61
사업자	금융지원	4.76	3.58
	교육지원	4.18	3.52
	현금지원	4.33	3.33
취준생	금융지원	4.58	3.68
	교육지원	4.04	3.58
	현금지원	4.24	3.48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취업자, 사업자, 취업준비생들 모두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만족도의 경우 현금지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청년부채 지원사업의 IPA분석



이를 IPA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금융지원은 지속유지 사업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현금지원이 중점강화 사업으로 나타났다. 학생 외 현금지원은 점진개선편으로 구분되었다. 취업준비생에게 현금지원이 중점강화 사업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부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여겨진다.

〈표 36〉 청년부채 지원사업의 효과성

구분	변수	평균
학생	경제교육강화	3.89
	청년일자리확대	4.26
	청년창업 지원	4.28
	등록금 인하	4.48
	대부업체 규제	3.83
	청년수당 확대	4.40
	청년회생제도 확대	4.15
취업자	경제교육강화	3.67
	청년일자리확대	4.31
	청년창업 지원	4.21
	등록금 인하	4.31
	대부업체 규제	3.60
	청년수당 확대	4.37
	청년회생제도 확대	3.99
사업자	경제교육강화	3.73
	청년일자리 확대	4.48
	청년창업 지원	4.33
	등록금 인하	4.27
	대부업체 규제	4.03
	청년수당 확대	4.45
	청년회생제도 확대	4.27
취준생	경제교육강화	3.58
	청년일자리확대	4.36
	청년창업 지원	4.18
	등록금 인하	4.48
	대부업체 규제	3.48
	청년수당 확대	4.26
	청년회생제도 확대	3.94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자의 경우는 ‘청년수당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효과적이 사업은 직업군에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①등록금인하, ②청년일자리 확대, ③청년수당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여겨진다.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청년들의 소비문화보다는 근본적인 교육비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6) 충남 청년정책 방향

〈표 37〉 충남 청년구직촉진수당 필요성

	학생	취업자	사업자	무직	계
보통	0.0	1.8	0.0	0.0	0.91
그렇다	62.5	59.88	66.67	70	62.7
매우 그렇다	37.5	38.32	33.33	30	36.4

충남의 모든 청년들이 충남 청년구직촉진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청년들의 6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6.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남에서는 충남형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없는데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38〉 충남 자산형성지원사업 필요성

	학생	취업자	사업자	무직	계
보통	0.0	0.6	0.0	0.0	0.3
그렇다	15.0	14.4	18.2	26.0	16.7
매우 그렇다	85.0	85.0	81.8	74.0	83.0

또한 충남의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83.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다. 충남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7) 청년 삶의 질

〈표 39〉 현재 삶의 질과 미래 성공 가능성

구분	현재 삶의 질	미래 성공가능성
학생	6.1	7.0
취업자	6.9	7.7
사업자	6.8	7.4
취준생	5.9	7.1
계	6.5	7.4

청년들의 현재 삶의 질은 10점 만점으로 볼 때 평균 6.5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삶의 질 평가가 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도 6.1점으로 취업자나 사업자의 6.9점, 6.8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미래 성공가능성도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자나 사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FGI 분석결과

#### 1) 삶의 질

〈표 40〉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참여자	의견
A	삶의 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B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	제 삶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미래가 엄청 밝을 것 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D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E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5명의 참여자 중 3명이 무(無)여유, 진로 걱정, 부채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1명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표 41〉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이유

참여자	의견
A	청년부채가 감소된다 해서 당장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	교육비 지출감소, 청년수당을 통한 소비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D	청년들의 사회활동 의지를 북돋아 주기위한 청년부채감소정책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	내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부채감소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 투자를 유도하고, 부채에 대한 부담 감소,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명은 청년부채 감소가 삶의 질 향상에 즉각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표 42〉 충청남도에 제안하는 정책

참여자	의견
A	학자금에 이자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	학자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앞으로도 청년정책(부채, 교육) 등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D	청년을 위한 일자리 증가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E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학자금 상환 지원, 정규직 취업 지원, 교육 투자 등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 대학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자상환 지원, 원리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으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증가 및 정규직 채용, 취업 교육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 2) 소득과 지출

〈표 43〉 본인의 소득

참여자	의견
A	보통 30~40만원 사이이며 아르바이트는 학업 문제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제 월 평균 소득은 일일 아르바이트로 20~30만원 정도를 벌고 용돈으로 씁니다.
C	제 한달 소득은 40만원이며 부모님으로부터 간헐적으로(분기별) 5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D	제 한달 소득은 250만원이며 대학 연구실의 연구용역비로 벌고 있습니다.
E	제 고정 한달 소득 0원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회 도우미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10만원 정도 생활비에 보탬 때가 있습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참여자는 1명이고 3명이 생활비 대출을 고려중이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본인의 지출

참여자	의견
A	월평균 지출은 버는 만큼 쓰는 것 같습니다.
B	월 평균 지출은 40만원정도입니다.
C	제 월평균 지출은 30만원선입니다.
D	월평균 지출은 100만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은 배달음식과 식당 등의 외식비입니다.
E	월 평균 30~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거회 대부분이 식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고,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읍주나 옷 사는데 씁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 지출로 사용 중이며, 이 중 2명은 생활비 대출을 받고 있다. 또한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와 의류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3) 청년부채 실태와 원인

〈표 45〉 본인의 부채 종류와 금액

참여자	의견
A	학자금대출로 약 2,800만원 있습니다.
B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매 학기마다 받아왔고 금액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C	학자금 대출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D	최근 내집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E	현재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로 700만원 정도 가지고있습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현재 학자금 대출을 부채로 가지고 있으며 1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 부채가 없는 참여자는 없고 현재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참여자가 4명이다.

〈표 46〉 대출기관, 대부업체 이용 경험

참여자	의견
A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빌렸습니다.
B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렸습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적은 없습니다.
C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약 500만원 정도는 가끔 학기마다 생활비 대출로 받았습니다.
D	1금융권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 경험은 없습니다.
E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1명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5명 모두 대부업체 이용경험은 없다.

〈표 47〉 본인 부채의 원인

참여자	의견
A	학자금 대출 이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B	제가 가진 부채는 모두 생활비와 관련된 대출입니다. 그 외의 부채는 없습니다.
C	부채의 주된 원인을 꼽자면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쓰인 비용입니다.
D	현재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자금대출 부채가 있었습니다.
E	학자금 및 생활비대출입니다.

5명의 참여자 중 3명이 대학 등록금, 학생 때 생활비를 원인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다. 1명은 현재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그 외 1명은 주택담보대출을 부채로 가지고 있다.

〈표 48〉 본인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 금액, 아르바이트로 충당 가능 여부

참여자	의견
A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충당하기 어렵고 대학원에 있는 관계로 시간 또한 내기가 어렵습니다.
B	금액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생활비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충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약 천만원 가량 됩니다. 영세업체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학업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많은시간을 못합니다.
D	2학기 등록금이 9백~1천만원정도이고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경우 한 학기에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한 학기 등록금 450만원을 충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E	등록금은 980만원 정도 이며, 현재는 조교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고, 생활비가 조금 빠듯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 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이며 이들 모두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 1명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표 49〉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의 수준

참여자	의견
A	이자는 낮지만,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B	학자금은 아니지만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의 수준은 낮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이자율도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C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을 했는데, 그 이자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D	요즘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 2.5%는 많이 낮아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도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1%정도로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	이자수준은 시중 이자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지만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5명의 참여자 중 5명 모두 학자금대출의 이자수준은 낮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다고 하여도 부담의 정도가 작아질 뿐 부담의 여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표 50〉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

참여자	의견
A	학자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B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를 비롯한 거주비용이 증가하고,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C	대학에 진학을 하게되고 더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려다보니 큰 비용을 치루게 되는것입니다.
D	대다수 청년들의 부채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입니다.
E	근본적으로 청년부채의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로서 등록금, 생활비를 포함하는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생기는 부채를 원인으로 답변하였다. 그 중 1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학력 선호 현상을 추가적인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 1명은 청년부채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51〉 청년들의 소비문화가 청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

참여자	의견
A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비를 내면 당장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줄고 좀 더 여유롭게 학기를 보낼 수 있으며, 소비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C	그 정도가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즐기는 문화가 저비용부터 고비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지만 미미할거라 생각합니다.
D	부채를 내서 과소비를 하는 청년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소비문화는 청년부채의 증가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E	아니오, 청년들의 소비문화가 과소비로 보여 질 순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과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소비문화가 청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답변하였다. 문화 비용의 다양성, 문화 비용의 출처, 결제력 등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문화에서 비롯된 과소비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외 1명은 학자금 대출로 여유를 만들고 현재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였다.



#### 4)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표 52〉 본인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에 비교한 부채의 위험수준

참여자	의견
A	위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B	위험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은 됩니다.
C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후에 취직을 하게되면 갚을수 있을 정도의 부채입니다.
D	위험수준은 아닙니다.
E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담은 갑니다.

5명의 참여자 중 5명 모두 본인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에 비교한 부채가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기대 미래 수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 53〉 본인의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는지의 유무와 이유

참여자	의견
A	현재는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B	아니오. 아직 상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장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C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는건 없습니다.
D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 받지는 않았습니.
E	그다지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고, 가끔가다 잔액 확인하면 부채 상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입니다.

5명의 참여자 중 5명 모두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작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불안감, 압박감 등의 심리적인 피해는 받고 있지만 부채상환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표 54〉 본인의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	의견
A	미래에 이것들을 갚아야 하는데, 많은 액수를 어떻게 갚고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B	빌릴 때 마다 불안감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 하는 학자금도 심리적 압박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C	취직 후 부채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결혼이나 자녀계획은 조금 미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부채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 쯤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D	부채를 갚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E	스트레스는 받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5명의 참여자 중 3명이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는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미래, 미래에 있을 압박감 등을 거론하였다.

## 5) 정책과의 미스매치 및 정책방향

〈표 55〉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참여자	의견
A	학생들이 학업관련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미래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B	1. 취업지원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에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정책과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독일의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사람들은 시간만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D	사병월급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면 2년 복무하며 2천만원이상 저축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	제 생각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로서 학자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취업 교육 지원, 일자리 만들기, 사병 월급 인상 등의 의견이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취업 교육 지원,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소득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병월급 인상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사병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표 56〉 정부와 자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 경제(소비)교육 강화

참여자	의견
A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	핸드폰요금제나 보험같이 사회 초년생들이 가입하기 복잡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	사실상, 제 생각엔 청년부채가 소비를 못해서 부채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채를 통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주변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가 있겠지만 적을거라 예상합니다.
D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E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의지가 있어서 수강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교육을 해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일자리 확대

참여자	의견
A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통해 부채 상황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미래에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빌리는 학자금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	일자리의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	가장 효과 있는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얻으면 부채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E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창업 지원

참여자	의견
A	창업지원도 좋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B	과거에 비해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을 하고자하는 청년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학생의 부채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을 하려하지만 기반이없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청년부채에 큰 영향을 못미칠거라 생각합니다.
D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부채만 많아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할 것 같습니다.
E	해결에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등록금 인하

참여자	의견
A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B	청년부채가 줄어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학자금만큼 빛을 지지만 그 학자금이 줄어드니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C	등록금 인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을 땐 큰 효과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D	충분한 효과를 거둘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부채가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하면 이를 위한 학자금 대출도 감소할 것입니다.
E	등록금 인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업체 규제

참여자	의견
A	대부업체 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B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C	대부업체 규제도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이 신용이 없다보니 목돈을 빌릴곳이 없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D	대부업체의 이자율 한도를 규제한다면 청년부채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E	청년부채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수당 확대

참여자	의견
A	청년수당의 폭을 넓히고 진입 조건을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B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유가 생기니 남은 돈으로 학자금이나 다른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C	청년수당은 청년의 기초소비를 늘리고자 함인데 이는 청년부채의 주된 원인이 교육비지출이라하면 적어도 생활비지출의 양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D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 확대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E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부채 절감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희생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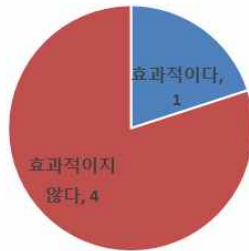
참여자	의견
A	희생제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B	희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그런 소수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C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에게 희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체 청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D	희생기회가 주어지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므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	청년부채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등록금 인하, 청년수당 확대 등의 정책은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정책이 효과적이라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경제(소비)교육 강화, 청년창업 지원, 대부업체 규제, 청년희생제도 확대 등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교육 대상자 문제, 효율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경제(소비)교육 강화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지속가능성, 소수의 정책 대상자, 리스크 등의 원인으로 청년창업 지원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자 부채, 효율성 등의 원인으로 대부업체 규제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파악되었다. 소수의 정책 대상자, 효율성 등의 원인으로 청년희생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은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청년부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등록금 인하 정책은 청년부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청년부채 감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생활비 지출의 부담 감소, 부채 감소, 소비 증가 등의 이점으로 청년수당 확대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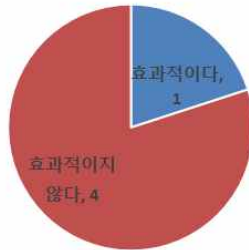
< 경제(소비)교육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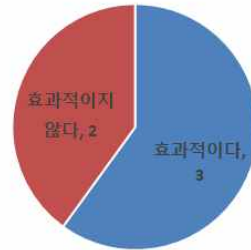
< 청년일자리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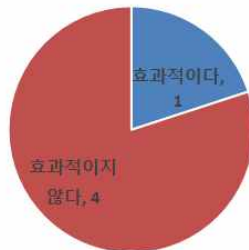
< 청년창업 지원 >



< 등록금 인하 >



< 대부업체 규제 >



< 청년수당 확대 >



< 청년희생제도 확대 >





〈표 57〉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의 필요 여부

참여자	의견
A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C	국가에서 주는 월 30만원은 조금 적기 때문에 만약 충남 자체에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합니다.
E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5명 전원이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의 이유로는 수혜 대상이 한정적인 국가 프로그램의 대체,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부담 감소, 생활비 부담 감소 등이 있다.

〈표 58〉 국가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의 필요 여부

참여자	의견
A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인원들을 위해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도 비슷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빚도 더 갚을 텐데 보상금도 받으니, 빚을 갚는 것에 더해서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C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유인할수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라도 부담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D	만기공제금 1,600만원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청년들로 하여금 부채 탕감과 여유로운 생활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판단의 이유로는 수혜 대상이 한정적인 국가 프로그램의 대체, 부채 상환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업 간 연봉격차 축소, 여유로운 생활여건 형성 등이 있다. 지원시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1명은 현재 만기공제금이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남의 자체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6) 시사점

청년부채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을 학자금 대출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학기당 평균 5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 1,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학자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같은 학생이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이자지원에서 배제되어 대학원생을 위한 이자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생필품 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취방이나 기숙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생활비 대출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기초생활비와 주거비도 청년 부채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소비문화에 대해서는 자기만족이며, 최소한의 품위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별히 청년들이 과소비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적이었다. 부채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이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없지만 학부 4년간 대출금액이 쌓이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의 부채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담이 결혼과 자녀계획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들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바라는 정책으로는 무조건 대학입학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개선, 군입대 사병월급 향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있었다. 마이스터고 등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입대 후 받는 사병월급을 올려준다면, 상당 부분 청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 모든 청년들을 포함하기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동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등록금 인하, 청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청년 창업지원의 경우는 소수만이 혜택을 본 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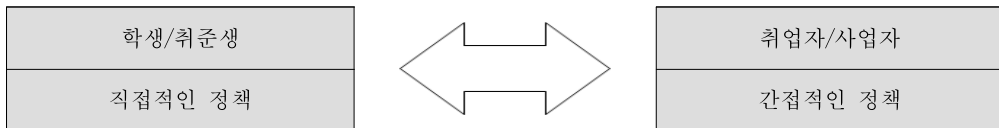
## 제4장 정책방향 및 전략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FGI를 통해 충남 청년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충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는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의 직업군은 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사업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충남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학생·취업준비생과 취업자·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취업준비생과 소득이 있는 취업자·사업자의 부채특성은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와 사업자보다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청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부채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채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라기보다 간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채에 대한 금리인하 등은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다.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일자리관련 정책으로 치중될 수 있다.

〔그림 14〕 청년 부채해소를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



이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3대 정책방향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의 현재 삶의 질은 10점 만점으로 볼 때 평균 6.5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삶의 질 평가가 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도 6.1점으로 취업자나 사업자의 6.9점, 6.8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소득은 80만원대로 매우 낮지만 지출은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아르바이트와 용돈이 대부분, 단순 학자금 대출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니고 있었다.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 문화·여가비의 지출이 높았지만,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학비, 교육비, 식비 등 생필품 지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직기간이 길고,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도 현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부채는 대부분 학자금이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가 나가기 전 이미 928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기 쉬운 학자금 대출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즉 빚을 지기 쉬운 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과소비와 부채 간에는 분명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된 부채가 학자금이란 점에서 청년들의 물질주의나 과소비가 부채의 원인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다.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원인은 소비문화보다는 부족한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적은 소득, 부족한 금융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청년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문화·여가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채감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채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이자 면제나 완화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의 경우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이 42.4%를 높게 나타났다. 학생 때부터 선제적인 대출 및 지출관리 습관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가 사업자금이었고 30.3%가 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이 있었다. 또한 15.2%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에 관대한 청년창업펀드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학자금대출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대출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사업자의 경우 제2금융권의 대출비중이 21.2%, 대부업체 대출비중이 3.0%)

정책 IPA 분석결과 금융지원은 지속유지 사업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는 현금지원이 중점 강화사업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격의 포괄보조사업(청년구직촉진 수당 등)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① 등록금인하, ② 청년일자리 확대, ③ 청년수당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청년들의 소비문화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비(학자금)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1. 정책방향

〈표 59〉 3대 정책 방향

①	②	③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부채원인의 원천적 차단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충남 청년부채해소 정책을 위한 3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실수나 무지로 인한 부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올바른 사전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대출이나 올바른 지출관리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청년들이 부채로 진입하게 되는 부채경로의 원천적인 차단이다.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첫 부채를 떠안게 된다. 따라서 긴급 생활비 지원, 장학금 확대, 포괄적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첫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채확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이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취업준비생의 대출이자 면제나 완화정책이 필요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2. 추진전략

3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9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0〉 3대 정책방향에 따른 9대 전략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학생, 취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사전 경제교육을 통한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 강화(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경제교육 실시</li> </ul> </li> <li>○ 전략2: 청년·서민금융 홍보를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접근성 개선(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금융, 서민금융 홍보리플릿 제작, 설명회 개최</li> </ul> </li> <li>○ 전략3: 취·창업 교육 확대를 통해 취업 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맞춤형 취업교육, 지역 특화 창업교육 실시</li> </ul> </li> </ul>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 (학생, 취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청년 창업펀드 조성</li> </ul> </li> <li>○ 전략2: 포괄적·자율적 자금지원 확대(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청년수당, 청년통장 추진</li> </ul> </li> <li>○ 전략3: 청년들의 주거·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문화·여가활동 보조 및 다양한 행사 마련</li> </ul> </li> </ul>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부채자의 이자면제 및 완화(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지원 대상 확대, 사각지대 조사</li> </ul> </li> <li>○ 전략2: 청년 펀드(기금) 조성(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희망펀드 조성</li> </ul> </li> <li>○ 전략3: 청년 신용회복 정책 추진(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li> </ul> </li> </ul>

### 1)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 ■ 사전 경제교육을 통한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경우 부족한 금융지식, 잘못된 보험상식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있다. 청년 때부터 올바른 지출 습관과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 개개인의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부채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 ■ 청년·서민금융 홍보를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접근성 개선

청년들의 경우 청년금융이나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적고, 어디서 돈을 빌려야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정보를 청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금융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와 학교 설명회 등을 통해 이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 ■ 취·창업 교육 확대를 통해 취업 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

취업기간이 길어지면 청년들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지자체에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할 때 취·창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전달하여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 2) 부채원인의 원천적 차단

### ■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확대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 펀드를 구축하여, 충남 내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하기 쉬운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 포괄적·자율적 자금지원 확대

경기, 대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은 아직까지 충남형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구직활동 지원금 등 국가의 청년수당 정책이 있지만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수당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 청년들의 주거·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인해 소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부채의 원인이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이기 때문에 주거비의 지원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부채는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3)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 ■ 부채자의 이자면제 및 완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책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각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과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임에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위한 이자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 ■ 청년 펀드 조성

청년부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예산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차원의 청년희망펀드가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청년펀드에 대한 추진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복지, 청년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 청년 신용회복 정책 추진

이미 부채경로에 진입한 청년들, 특히 취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충남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FGI를 통해 청년부채의 실태와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남 차원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자나 사업자보다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과 청년부채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확대 등 간접적인 지원책도 병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현황 및 문 제 점

- 청년들의 현재 삶의 질은 10점 만점으로 볼 때 평균 6.5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삶의 질 평가가 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도 6.1점으로 취업자나 사업자의 6.9점, 6.8점보다 낮게 조사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소득은 80만원대로 매우 낮지만 지출은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 (아르바이트와 용돈이 대부분, 단순 학자금 대출만의 문제가 아님)
-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 문화·여가비의 지출이 높았지만,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학비, 교육비, 식비 등 생필품 지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해결이 필요
- 졸업 후 취직기간이 길고, 취업자와 사업자의 경우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움
-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부채는 대부분 학자금이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에 나가기 전 이미 928만원의 빚을 지고 시작 ➡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
  -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기 쉬운 학자금 대출로 학자금을 충당하여 빚을 지기 쉬운 구조
- 청년들의 과소비와 부채 간에는 분명 개연성이 있음. 그러나 청년들의 주된 부채가 학자금이란 점에서 청년들의 물질주의나 과소비가 부채의 원인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음
  -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원인은 소비문화보다는 부족한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적은 소득, 부족한 금융정책에 더 큰 비중이 있음
- 청년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문화·여가비로 나타남 ➡ **부채감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함**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채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는 비중이 높음 ➡ **이자면제나 완화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자의 경우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이 42.4%를 높게 나타남 ➡ **학생 때부터 선제적인 대출 및 지출관리 습관의 유도가 필요**
- 특히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가 사업자금이고 30.3%가 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이 있고 15.2%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패에 관대한 청년창업펀드 등 지원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학자금대출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대출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사업자의 경우 제2금융권의 대출비중이 21.2%,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3.0%)</li> <li>○ 정책 IPA 분석결과 금융지원은 지속유지 사업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는 현금지원이 중점강화사업으로 나타남 ⇨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격의 포괄보조사업(청년구직 촉진 수당 등) 추진 필요</li> <li>○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①등록금인하, ②청년일자리 확대, ③청년수당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남 ⇨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청년들의 소비문화보다는 근본적인 교육비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li> </ul>
--	---

첫 번째 정책방향은 부채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두 번째는 부채원인을 차단하는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이다. 세 번째는 이미 부채경로에 진입한 청년들을 위한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이다.

비전	“청년이 즐거운 충남, 청년이 행복한 충남”
정책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li> <li>2.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li> <li>3.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li> </ol>

3대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① 사전 경제교육을 통한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 강화, ② 서민금융 홍보를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접근성 개선, ③ 취·창업 교육확대를 통해 취업 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제시하였다.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①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② 포괄적·자율적 자금지원 확대, ③ 청년들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① 부채자의 이자면제 및 완화, ② 청년 펀드(기금) 조성, ③ 청년 신용회복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추진 전략	선제적 금융 교육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사전 경제교육을 통한 대출 및 지출관리 역량 강화</li> <li>○ 전략2: 서민금융 홍보를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접근성 개선</li> <li>○ 전략3: 취·창업 교육 확대를 통해 취업 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li> </ul>
	부채경로 진입의 원천적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li> <li>○ 전략2: 포괄적·자율적 자금지원 확대</li> <li>○ 전략3: 청년들의 주거·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li> </ul>
	부채자의 금융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1: 부채자의 이자면제 및 완화</li> <li>○ 전략2: 청년 펀드(기금) 조성</li> <li>○ 전략3: 청년 신용회복 정책 추진</li> </ul>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이다.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학자금과 청년들의 생활비, 주거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에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은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 안에서 예산이나 대상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간적·예산적 제약으로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청의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전략별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부채 문제가 지역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수당, 청년통장 같은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유사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박권일(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제64권, p.63-76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社會 保障 研究, 제26권 3호, p.49-72
- 반정호(2010),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 노동리뷰, 제2010권 11호, p.53-64
- 정민우 이나영(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호, p.105-145
-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3호, p.257-279
- 정수남 외 3명(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제12권, p.35-103
- 박성재 반정호(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社會 保障 研究, 제28권 1호, p.163-190
- 변금선(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0권 4호, p. 345-373
- 김영(2013),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翰林日本學, 제23권, p.219-251
- 김수정(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권 1호, p.223-247
- 황서연(2014),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 모델과 당면과제: 청년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107권, p.86-111
- 류기락(2014),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분석: 소득보장과 취업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14권, p.98-138
- 최은영 이봉조(2014),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제2014권 12호, p.56-61
- 이종아 한창근(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2권 4호, p.75-100

이세미 이지연(2016), “청년의 부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9권, p.285-299

안홍순(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제43권 3호, p.59-83

박치현(2016), “청년, 먹고 살기만 힘든 게 아니다 - 청년들의 ‘이야기’ 빈곤에 대하여”, 가톨릭 평론, 제3권, p.16-27

이태진 외 7명(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6권, p.1-227

곽동철 외 2명(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 요인 고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8권 4호, p.77-94

김기현 외 4명(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1-252

김현경 외 3명(2016), “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6권, p.1-187

서종녀(2016), “서울시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지원정책 현황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016권 4호, p.229-250

김태완 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제244권, p.6-19

박애리 외 2명(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2호, p.1-20

이승미(2017), “청년의 삶과 지원정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 논문집, 제2017권 11호, p.95-108

주희정 김민석(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2호, p.59-88

김선주 장성대(2018), “청년세대의 주택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大韓不動産學會誌, 제36권 2호, p.67-82

남재욱 외 2명(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9권 1호, p.221-262

[부 록 1]

# 청년부채 실태조사

## 설문지

# 청년부채 실태조사 설문지

Q

기초조사

q1. 성별 ☞ 조사원이 기입

① 남

② 여

q2. 귀하는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지

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취업자

③ 사업자

④ 무직(취준생 등)

[q3의 취업자, 사업자만 응답해주세요]

q3\_1.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광업·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농림어업

④ 기타

q3\_2. 그렇다면 귀하의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②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1년)

③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④ 사업자

q3\_3. 귀하는 졸업 후 얼마 후에 취직이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 이상

q4.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만원

q4\_1. 그렇다면 귀하의 유형별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용돈	아르바이트	기타
( )%	( )%	( )%	( )%	( )%

※ 합이 100%가 되게 말씀해 주세요.



q5.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 )만원

q5\_1. 그렇다면 귀하의 유형별 지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식비	( )%
주거비	( )%
의료비	( )%
교통/통신비	( )%
의류/신발/오락/문화비	( )%
학비/교육비	( )%
기타	( )%

※ 합이 100%가 되게 말씀해 주세요.

A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부채내용	금액
카드빚	( )만원
대출금	( )만원
학자금	( )만원
기타	( )만원
계	( )만원

a2. 귀하의 주요 대출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은행                                      ② 한국장학재단                                      ③ 정책서민금융  
④ 제2금융권                                      ⑤ 대부업체                                      ⑥ 기타( )

a2\_1. (a3의 ④, ⑤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지금부터는 대학생/대학원생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귀하의 최근 1년간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 )만원

a4. 그렇다면 귀하는 학자금을 어떻게 충당하였습니까? (복수응답)

- ① 부모님 및 친인척에게 의존                                      ② 장학금으로 충당  
③ 아르바이트를 해서                                      ④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⑤ 기타( )



c4. 귀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체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4\_1. 연체경험이 있다면 최대 연체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개월

c5. 귀하는 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6. 귀하는 채무조정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6\_1. 채무조정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① 개인워크아웃

② 개인회생

③ 개인파산

## D

##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가 알고 있는 청년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취급처	선택
대학생·청년 햇살론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취업성공대출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바뀌드림론	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15개 은행	
새희망홀씨	15개 은행	
징검다리론	15개 은행	
든든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한국장학재단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통합지원센터	

d2.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자산형성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사업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현금지원	①	②	③	④	⑤

[보기카드]

사업	내용	
금융 지원	대출금리 지원	대출금리 인하,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용회복 기금조성	기금을 통해 부채반복과 악성화 방지
	단기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발	최대 5년간 상환, 이후 잔존채무 상환면제
	학자금 지원	충남형 장학금 확대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햇살론 등 정책 홍보
	청년 사회적금융 육성	협동금융, 청년 마이크로크레딧 등
교육 지원	가계생활, 금융 상담	적정대출 유도, 올바른 재무관리
	신용회복 교육 강화	상환불능 시 불이익, 신용회복 교육 등
	심리치료	채무독촉 심리 치료, 채무조정 상담 등
현금 지원	청년수당	구직활동 지원금 등
	청년통장	저축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

d4.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청년경제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청년일자리 및 창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등록금 인하	①	②	③	④	⑤
대부업체 규제	①	②	③	④	⑤
청년수당 확대	①	②	③	④	⑤
청년회생제도 구축	①	②	③	④	⑤

E

충남 청년정책 방향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1\_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2\_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F**

**청년 삶의 질**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부터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f2. 귀하의 미래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많다)까지의 숫자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청년부채 실태조사

## 학생 및 취업준비생 FGI 시트

Q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A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정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D**

##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d2.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지원	
등록금 인하	

대부업체 규제	
청년수당 확대	
청년회생제도 확대	

**E**

### 충남 청년정책 방향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 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GI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2]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02.28.]

(제정) 2016-02-22 조례 제 4094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4187호  
(일부개정) 2017-02-28 조례 제 4225호

관리책임부서 :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성장본부장, 경제통상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7. 2. 28.>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여확대
- 2. 능력개발
- 3. 고용확대
- 4. 주거와 생활안정
-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 6. 권리보호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신설 2016. 12. 30.>
-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신설 2016. 12. 30.>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5장 보칙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3]

## 청년부채 실태조사

### FGI 내용정리

## 참여자 A

Q

###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며, 단기 학교 알바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30~40만원 사이이며 아르바이트는 학업 문제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또한 받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월평균 지출은 버는 만큼 쓰는 것 같습니다. 식비가 대부분이며, 가끔 옷을 사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하기에 지나치게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A

###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자금대출로 약 2,800만원 있습니다.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빌렸습니다.

##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학자금이 주이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충당하기 어렵고 대학원에 있는 관계로 시간 또한 내기가 어렵습니다.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자는 낮지만,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 등록금이 동결을 하더라도 그 이외에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주거비 등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부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정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현재는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미래에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불안감만 존재할 뿐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미래에 이것들을 갚아야 하는데, 많은 액수를 어떻게 갚고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D**

##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근본적으로 부채는 학자금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업관련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미래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d2.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통해 부채 상환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창업지원도 좋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등록금 인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대부업체 규제	대부업체 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확대	청년수당의 폭을 넓히고 진입 조건을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생제도 확대	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b>E</b>	<b>충남 청년정책 방향</b>
----------	-------------------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정적입니다. 그 부분을 수혜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 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이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인원들을 위해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삶의 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부채가 감소된다 해서 당장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미래에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에 이자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 B

Q

###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월 평균 소득은 일일 아르바이트로 20~30만원 정도를 벌고 용돈으로 씁니다. 집에서 용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해서 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습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지출은 4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비와 주거비 등에는 최대한 아끼고 의류에 비교적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A

###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매 학기마다 받아왔고 금액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빚은 없습니다.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렸습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적은 없습니다.

##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부채는 모두 생활비와 관련된 대출입니다. 그 외의 부채는 없습니다.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장학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은 없고 생활비 대출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생활비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충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학자금은 아니지만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의 수준은 낮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이자율도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를 비롯한 거주비용이 증가하고,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학생 때 쓰는 돈 뿐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 주택 등을 구매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청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정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비를 내면 당장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줄고 좀 더 여유롭게 학기를 보낼 수 있으며, 소비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은 됩니다.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아니오. 아직 상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장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빌릴 때 마다 불안감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앞아야 하는 학자금에 심리적 압박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D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1. 취업지원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에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기술직으로 취직해도 사회적 인식이나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대학  
진학률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청년부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하겠지만 전문기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기술로써 사회와 경제성장에 공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정책과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대학원생까지 확대하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제로 있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  
반 대학생들과 생활환경에 있는데 학생으로 있으면서 상환까지 해야되니 부담이  
상당합니다.

d2.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핸드폰요금제나 보험같이 사회 초년생들이 가입하기 복잡한 분 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줄어 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미래에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빌리는 학자금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과거에 비해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리스 크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을 하고자하는 청년은 소수 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학생의 부채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하	청년부채가 줄어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만큼 빚을 지지만 그 학자금이 줄어드니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대부업체 규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확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유가 생기니 남은 돈으로 학자금이나 다른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회생제도 확대	회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그런 소수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E	<b>충남 청년정책 방향</b>
---	-------------------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충남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다면 대출을 덜 받을 것이고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도 비슷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빚도 더 갚을 텐데 보상금도 받으니, 빚을 갚는 것에 더해서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와 대출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당장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취업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디 놀러가려고 하면 제가 여유가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년들은 대출받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갚는 비용이 있는데 부채감소 정책으로 그 비용이 줄어드니 그만큼 자기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자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은 대출 받지 못하고 대출받은 이후부터 바로 이자를 내야하는 일반학자금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이자 지원프로그램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 이자도 내야하니 부담이 됩니다. 학업과 겹쳐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인턴을 더 많이 뽑는다거나 현재 떠오르는 분야들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전문가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기술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 분야의 폭도 넓어지고 취업한 청년들은 결국 청년부채와 그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C

Q

###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한달 소득은 40만원이며 부모님으로부터 간헐적으로(분기별) 5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없으며, 교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중입니다. 소득이 더 많다면 좋겠지만 40만원+부모님 지원으로 밥값정도를 충분히 생활중이지만 가끔 소요되는 원룸값 또는 등록금에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가끔 생활비 대출로 충당해서 사용중입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제 월평균 지출은 30만원선입니다. 거의 80%가 식비로 소비중이며, 식비 주거비등은 1회 납입이지만 그 규모가 큼니다. (대략 주거비 월 10, 식비 24만원 선)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작기 때문에 의류/신발/오락/문화비는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즉 2순위로 소비중입니다. 또한 의류/신발/오락/문화비는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카드빚은 아직 채용이 확실시 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하고 있으며, 일반대출금도 역시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약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약 500만원 정도는 가끔 학기마다 생활비 대출로 받았습니다.

##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부채의 주된 원인을 꼽자면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쓰인 비용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려면 2개월 가량의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지만 대외활동, 토익학원 등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학동안에도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해야합니다. 취업하면 갚자는 생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학비는 더 비싸졌습니다.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약 천만원 가량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을 하기에는 학기마다 380만원의 학비와 60만원의 기숙사비 그리고 여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학부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근로장학생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교내아르바이트가 아닌 영세업체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학업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많은시간을 못합니다.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을 했는데, 그 이자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실업률에 대한 고용불안정성이 청년으로 하여금 교육의 수요를 증대시킵니다. 이에 누구나 안정적이며, 화이트칼라 위주의 고소득 일자리를 찾는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나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되고 더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려다보니 큰 비용을 치루게 되는것입니다.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정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부채의 증가가 올로와 같은 현재소비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더욱더 부각되고, 충분히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즐기는 문화가 저비용부터 고비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지만 미미할거라 생각합니다.

##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후에 취직을 하게되면 갚을수 있을 정도의 부채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갚다보면 자녀나, 결혼이 늦어질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는건 없습니다. 아직도 부채를 늘리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만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는 지금 소득수준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위에 말했듯이 취직후 부채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결혼이나 자녀계획은 조금 미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채상황을 하면서 전세대출금을 갚으면서 육아까지 가능할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부채상황이 어느정도 끝나갈때쯤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D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독일의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독일은 기술자와 고학력자의 연봉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시스템은 독일국민이라면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사람들은 시간만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계, 또는 돈을 벌기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일의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2. 다음은 정부나 자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사실상, 제 생각엔 청년부채가 소비를 못해서 부채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채를 통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주변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가 있겠지만 적을거라 예상합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확대가 문제가아니라 얼마나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질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을 하려하지만 기반이없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청년부채에 큰 영향을 못미칠거라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하	등록금 인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을 땐 큰 효과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부업체 규제	대부업체 규제도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이 신용이 없다보니 목돈을 빌릴곳이 없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확대	청년수당은 청년의 기초소비를 늘리고자 함인데 이는 청 년부채의 주된 원인이 교육비지출이라하면 적어도 생활 비지출의 양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청년희생제도 확대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에게 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 체 청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E	<b>충남 청년정책 방향</b>
---	-------------------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직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하고, 식비, 교통비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월 30만원은 조금 적기 때문에 만약 충남 자체에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 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격차를 줄여줄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특히 지방의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또한 청년은 문화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시설과 같은..)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인할수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 되지 않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제 삶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미래가 엄청 밝을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채로 인해 뭐든지 시작이 늦어질거라 생각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아직은 한 5점정도로 판단됩니다.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희망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 부채감소정책은 청년으로 하여금 쫓겨난 짐을 하나라도 덜을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비 지출 감소, 청년수당을 통한 소비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질이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부채, 교육) 등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 D

Q

###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한달 소득은 250만원이며 대학 연구실의 연구용역비로 벌고 있습니다. 결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수입입니다. 연구원 되기 전에는 고정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 대출로 생활했습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월평균 지출은 100만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은 배달음식과 식당 등의 외식비입니다. 후배 학생과 같이 식사하면 보통은 선배인 제가 사는 편이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이 7~80만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주거비(아파트 관리비 등), 통신비 등으로 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150만원 정도는 저축과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A

###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내집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학자금 대출이 4천만원까지 쌓이기도 했습니다. 일하게 되며 학자금 대출은 모두 갚았고 새로이 주택담보대출이 생겼습니다.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금융권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 경험은 없습니다.

##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자금대출 부채가 있었습니다.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2학기 등록금이 9백~1천만원정도이고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경우 한 학기에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한 학기 등록금 450만 원을 충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처음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던 2007년 이자율은 7%넘어가는 고금리였습니다. 요즘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 2.5%는 많이 낮아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정도로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이자가 없으면 상황가능성을 생각안하고 무턱대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질테니 아예 이자가 없는 것보단 1% 정도의 이자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청년들의 부채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입니다.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진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로, 탕진, 시발비용 등의 소비를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채를 내서 과소비를 하는 청년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소비문화는 청년부채의 증가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은 큰 돈이지만 갚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수준은 아닙니다.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부채를 갚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D**

##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국가는 병사에게 일반 직장인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병월급이 4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병월급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면 2년 복무하며 2천만원이상 저축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d2.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가장 효과 있는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얻으면 부채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부채만 많아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인하	충분한 효과를 거둘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부채가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하면 이를 위한 학자금 대출도 감소할 것입니다.

대부업체 규제	대부업체의 이자율 한도를 규제한다면 청년부채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확대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 확대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청년회생제도 확대	회생기회가 주어지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므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	<b>충남 청년정책 방향</b>
---	-------------------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직촉진수당지원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구직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나 현재 지원하는 최대90만원의 수당은 구직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합니다.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기공제금 1,600만원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게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시작하면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지가 꺾이고 취업포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 의지를 북돋아 주기위한 청년부채감소정책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업이고, 해결책은 일자리 증가입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증가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여자 E

Q

### 소득과 지출

q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정 한달 소득 0원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회 도우미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10만원 정도 생활비에 보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고정적이어서 대부분 대학원 진학 전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생활비대출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식비, 주거비 등 생활필수 비용보다 의류/신발/오락/문화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30~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거액 대부분이 식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고,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음주나 옷 사는데 씁니다. 주거비는 현재 본가에서 생활 중이라 따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A

### 청년부채 실태

a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종류(카드빚, 일반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는 무엇이며, 총 부채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로 7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a2 귀하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 B

## 청년부채의 원인

b1. 귀하가 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자금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학자금 및 생활비대출입니다. 생활비대출도 사실상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  
기 때문에 제 부채의 원인은 학자금 외에는 없습니다.

b2 귀하의 1년 기준 학자금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충당이 어렵습니까?

등록금은 980만원 정도 이며, 현재는 조교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고,  
생활비가 조금 빠듯합니다.

b3.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충당하였다면 그 이자의 수준(높다, 낮다 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자수준은 시중 이자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지만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b4. 청년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청년부채의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5. 귀하는 청년부채의 증가가 청년들의 소비문화[올로, 탕정하는재미(탕진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시발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청년들의 소비문화가 과소비로 보여 질 순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과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식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 C

### 청년부채로 인한 문제점

c1. 귀하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규모(용돈, 아르바이트 등)로 볼 때 위험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담은 갑니다.

c2. 귀하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겪었던 예로 말씀해주세요)

그다지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고, 가끔가다 잔액 확인하면 부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입니다.

c3. 귀하는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스트레스는 받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D**

## 정책과의 미스매치

d1. 귀하는 청년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교육지원, 현금지원 등 자유롭게 기술)

제 생각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취업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을 높였고 이로 인해 쓸데없는 청년부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d2.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청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소비)교육 강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의지가 있어서 수강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교육을 해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 지원	해결에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하	등록금 인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 규제	청년부채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확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부채 절감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생제도 확대	청년부채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E</b>	<b>충남 청년정책 방향</b>
----------	-------------------

- e1. 고용노동부는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년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책(청년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직후 취업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생활비까지 신경 쓰려면 취업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청년부채를 더욱 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정책(청년내일 채움공제) 이외에 충남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청년들로 하여금 부채 탕감과 여유로운 생활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1.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f2. 지자체의 청년부채감소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부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3.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8-XX · 충남 청년부채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글쓴이 · 김양중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월 일 / 발행 · 2017년 월 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63(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http://www.cni.re.kr>

© 2018,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